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4월혁명의 정치경제적 의미

정 병 호  
(연구소장)

## 1. 문제제기

사회는 변화 발전한다. 그런데 그 변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일 수도 있다. 문제는 사회의 변화가 순조롭지 못하거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혁명적 수단이 동원된다. 혁명은 혁명을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혁명, 사회혁명, 계급혁명, 사회심리혁명 등으로 분류한다. 정치혁명을 보는 입장은 다양하다. 보딩(J.Bodin)에 의하면 “국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혁명이라 하고, 정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명료한 개념이나 매우 정태적 입장에서 있음을 본다. 좀더 동태적 입장에 선 라케르(W.Laqueuer)는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혁명이란 정치체제에 대한 급진적 변혁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행 입헌제도의 파괴와 폭력의 사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혁명은 경제, 문화 혹은 사회구조 즉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개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대 혁명은 대체로 독재, 부패 및 사회질서의 와해에 대항하여 발전, 자유 및 사회정의의 깃발 아래 민중의 힘을 대변하는 지도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쓰고 있다. 학자들간의 견해가 다양하나 정치혁명의 근간은 국가권력 또는 권위구조에 대한 변혁이 초법적으로 급격히 발생되는 사태라고 할 것이다.

사회혁명은 정치혁명을 포함한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인드만(Hyndman)에 의하면 “혁명은 사회조직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경제 그 밖의 모든 상태의 변화이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혁명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철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티에(A.Mathiez)는 “참다운 혁명은 정치형태와 정부의정부의 집권자를 변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변경하여 재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정치 변혁과 사회변혁의 양면성을 강조한다.

계급혁명은 유해한 지배계급을 사회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소렐(G.Sorel)은 “계급혁명이란 무익하고 유해한 분자를 추방하는 사회혁명이다.”라고 한다. 그의 많은 학자들이 계급혁명을 소개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 주장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다. 맑스에 의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풀기 위해, 나아가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간의 대립 속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본다.

앵겔스(F.Engels)는 “지배계급을 물리친 다른 계급적 지배”를, 카우츠키(K.Kautsky)는 “과거 종속적이었던 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획득, 사회의 법적, 정치적 상층구조 특히 재산관계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심리혁명론은 인간의 행동변화와 심리, 이데올로기, 신앙, 가치체계 등이 사회적 구조와 기본적 사회과정의 변화에서 혁명이 발생된다고 본다. 소로킨(A.Sorokin)은 특히 인간의 심리적 변화를 중시하고, 메리엄(L.E.Merriam)은 권력 욕을 중시한다. 아렌트(Arendt)는 “폭력만이 혁명을 설명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없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자유의 구성을 목표로 할 때만이 혁명이다”라고 한다. 사회심리혁명은 사람과 사람관계를 중시하고 사람과 물질관계는 오히려 부차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본론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4월혁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좀더 넓혀 보자는 것이다. 4월혁명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을 동원해 접근하고 있다.

어떤 이는 치자와 피치자간의 자동성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혁명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기대한 민주주의 이상을 보지 못했던 사회적 좌절심리에서 찾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자유당정권의 대미종속과 해방후 기생적 자본축적이 가져온 경제적 하부구조가 부패정권을 유지시킨 죄업에서 4월혁명을 보기도 한다.

다음에서 4월혁명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을 살핀 다음 이를 종합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4월혁명의 정치적 상황

자유당 이승만 정부는 무엇보다도 주권재민의 원리를 형해화 했다. 민주주의 기

본원리는 백성이 주인이다. 그 주인에 의해 정부(입법, 행정, 사법)가 성립된다. 따라서 선거할 사람과 선출된 사람은 동일성 또는 자동성의 원리 위에 서게 된다. 이러한 형식논리는 켈젠의 이론대로 “형태, 수단, 방법”으로서 민주주의를 보게 된다. 이 원칙아래서 백성은 다스려지는 대상이 아니라 섬겨지는 주체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이승만 정권은 집권 이래 점점 백성들로부터는 이반되는 정치행태를 보여 주었다. 상론하는 것은 피하거니와 다음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1948년 당초 내각책임제로 제정된 헌법을 이승만 개인을 위해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1952년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 대통령 선거제를 직선제로 개헌했다. 당시 피난수도 부산에서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직선제로 개헌한 것은 이미 국회에서 간선으로는 당선에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이다.

1954년 초대 대통령(이승만)에 대해서도 재선제한을 철폐하자는 개헌을 했다. 이때 국회의원 재적수는 203명으로 개헌찬성 정족수인 3분의 2는 136명이었다. 그런데 이 개헌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135명으로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오입 산술방식을 동원해 가결로 처리한 것이다.

1956년 진보당 사건을 만들어 이 땅에서 진보정당 운동의 바탕을 압살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을 간첩죄의 누명을 씌워 법살한 것이다. 1958년 신국가보안법 개정과동을 거쳐 간첩죄, 간첩방조죄 등을 강화하여 야당탄압에 이용하고 사회를 점점 반공규율 사회로 만들어 갔다. 1960년 급기야 3.15 정부통령 선거 때는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자유당 이승만 정부는 건국 후부터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까지 진정한 민주주의 지향과는 다른 길로 이탈해 왔다. 지금까지의 이승만 정부의 반민주적 작태를 정리해 본다.

첫째, 이승만은 철저히 사인적(私人的) 권위주의체제(Privatized or Personalized authoritarianism)를 추구하였다. 즉, 민중을 억압하면서 자기 개인적 권력욕을 추구해 왔었다.

둘째, 민중의 빈곤과 가난을 권력조작에 이용해 왔다. 아직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가기에는 멀었다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부정투표의 관행화, 관권선거, 환표 등으로 민주주의 기분을 배제해 왔다. 이로써 내재적 혁명의 씨앗을 키워왔다.

셋째, 6.25 참상을 겪은 민중에게 갖가지 반공의식 교육과 진보당 탄압, 반공 관련 법령의 제정 등으로 반공규율사회를 축성해 왔다. 각종 정치파동 때마다 경찰, 반공청년단, 백골단, 땃벌떼 등이 동원되었다. 억압적 국가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를 총동원하여 민중을 반공망 속에 가두어 두었다.

넷째, 이러한 반공규율 사회는 보수적 논리의 타당성만을 용인함으로써 진보적 정향을 차단하는 정치문화의 파행성을 노정시켰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전상국가 아닌 예외국가, 국가주체가 없는 국가객체만이 존재하는 기형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지배정당성(legitimacy)과 민주주의 동일성(identity)에 대한 파괴로 진단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의 이의제기가 4월혁명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농촌자녀들이 살림의 큰 몫인 소를 팔아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골탑의 대학생은 당시 전체국민의 70%를 차지한 농민들의 뜻을 대변한 세력이었다. 4월혁명은 이들 대학생들의 동의(動議)에 의해 촉발되고 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성취되었었다.

### 3. 4월혁명의 경제적 상황

4월혁명 당시 경제적 상황 역시 국민들의 기대와는 상반되게 전개되고 있었다. 해방후 이승만 정부는 친일세력을 포용하면서 이들과 유착되어 관료적 매관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먼저 귀속재산 불하와 미국의 원조물자(GARIOA, UNKRA, 480PL 등) 배분을 통해 온갖 특혜를 특정 재벌에게 넘겨주었다. 이들 재벌들은 한국판 원시적 자본축적을 이렇게 하여 손쉽게 했다. 당시의 사정을 일러주는 삼백산업(제분, 제당, 방직)이 상징하는 것은 그 뜻이 깊다.

특히 미 잉여농산물 수입은 한국농촌 분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화와 소맥의 수입은 당장 목화밭과 밀밭을 없애버렸다. 영국에서 인클로저(Enclosure movement)운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한국의 농촌에서도 이농사태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실업의 증대를 가져 왔었다.

특히 미국의 경제원조는 당초 무상원조로 시작하여 그 다음 공차관으로 바뀌고 다시 상업차관으로 바뀌었으며 중국에는 직접투자 형식으로 바뀌어 나갔다. 이 도식은 선진국 독점자본의 자기관철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사정은 대미 종속성과 매관성이 심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으로 되었다. 미국원조 감소로 조세부담율을 높여 나갔고, 인플레이와 실업의 증가를 몰고 왔었다. 국가재정의 대미의존이 심화되고 독점자본에 대한 중소기업과 농업간의 파행적 구조를 보이게 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적으로 자본집중과 중소기업 도태를 초래했고, 특히 잉여농산물 원조는 저농산물 가격과 농업정체를 가져 왔으며 이는 다시 이농인구의 도시 집중과 실업을 낳고 실업은 저임금을 낳게 되었다.

이런 악순환은 종속과 빈부 갈등으로 요약되고, 여기서 민중들은 민족자립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갈구하게 된 것이다.

4월혁명 직후 ‘부정축재자 처벌요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그간의 사정을 잘 알려준다.

#### 4. 4월혁명의 정치경제적 의미

이상에서 4월혁명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을 따로 나누어 살펴보았거니와 이는 결코 따로 나뉘어진 사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관계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간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근대화론자들은 4.19 혁명을 “서구 부르주아 혁명”에 비유하기도 하고,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도 “친일정권을 청산한 민족주의 쾌거”라고 하며, 또 어떤 학자들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중주의 승리”라고 한다.

그런데 자기 전공영역이나 관심에 따라 일정하게 나름대로의 보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런 견해를 배타적으로 주장한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어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정치 경제적 접근이라고 본다.

먼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승만 정권은 사인권위주의에 얽매이고, 민중배제적 권력을 일삼으면서 반공규율사회를 확장해 갔다. 그리하여 결국 민주주의의 정도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구조가 하부구조인 경제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부구조는 대외종속과 빈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승만 정권은 하부구조의 병리현상을 담지하고 있는 관료매관자본과 짝을 이루면서 반민중 정권을 유지하려 한 성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부정한 자본과 부정한 정권의 공생이 4.19 당시의 한국사회구성체였다. 여기서 학생들은 잃어 내기를 민족자립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하부구조를 이루고 그에 상응한 정치민주화 지향세력이 상부구조를 이루는 것을 열망하는 혁명을 의욕했던 것이다.

여기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정통 맑시즘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 말은 옹호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혁명사태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예외적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요제프마저도 상부구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본다. 즉 사상교육이 하부구조를 개혁한다는 의미다. 알튀세(Althusser), 플랑차스(Poulantsas), 그람시(Gramsci) 등은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간의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부구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상·하부구조의 어느 쪽이 다른 한쪽을 기계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4월혁명은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불합리하게 엮여져 있는 것을 해체하여 이를 새롭게 정합시키려는 역사라고 본다. 잘못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그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권력을 생산하고 있는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상부구조와 상부구조간의 조화는 도둑에 의한 도둑의 생산을 지양하여 선량한 이에 의한 선량한 이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 문제의식은 “치자와 피치자간의 자동성(自同性)”을 살피는 입장과도 같은 차원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식의 실천을 위해 이런 사정을 남보다 먼저 읽을 수 있던 대학생들에 의해 4월혁명은 점화되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하여 막연히 세월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구성체의 조건이 달라졌다면 그에 상응한 이론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이 절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관계는 매우 피상적으로 다루었다. 4.19 당시의 사구체성격론도 구체성을 생략했다. 또 서로 단계가 다른 사회구성체의 이행론을 담는 것은 되지 못했다. 강의안은 향후 보완하고자 한다)

## 5. 결어

4월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다. 5.16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미완의 혁명은 진정한 민주화를 쟁취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4월혁명이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분명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두었다. 4월혁명을 계기로 진보정당이 출현하고 반미자주화운동이 일어났으며 새로운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발전은 4월혁명 정신을 그 전범으로 삼아 가게 될 것이다.  
민주, 자주, 통일의 이 시대 민족의 염원이 거기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월혁명회보 제62호(2001.11)**